

여야 '2+2 협의체' 예산안 합의 불발...원내대표 막판 담판

권력기관·신재생 예산 의견 접근 대통령실·지역화폐 입장차 여전 이상민 장관 해임 연계 놓고 공방

내년 예산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손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5일 이틀 동안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를 가동해 일부 쟁점에 대해선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6일부터는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직접 만났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에 관해 의견 차이 있던 걸 이점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며 "원내대표단끼리 회동은 정해진 것 없지만 필요하면 오후에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합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오늘부터 진행될 원내대표 간 협의에서 추가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는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 예산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쟁점 예산은 상당 부분 의견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년원거주책 등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은 애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액 삭감 대신 5~10%가량만

감액하고,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표 예산'은 일정 부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예산안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오는 8~9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문책안' 강행 처리시 예산협약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변수가 개입되면 예산(처리)에 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범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처리 진도도 더디다.

애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부 조세소위는 쟁점 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개최가 불발됐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연장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중부세)법 등 세입에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당·정 협의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연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정부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는 중이다. 이들 법안 역시 예산안과 함께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일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ju.co.kr·연합뉴스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통합정원제 운영

"비효율 조직 운용체계 통합 정비" 20개 부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51개 부처에서 기구·인력을 재조정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안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해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 운용체계를 통합·재편해 정비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과(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이 미래전략과(지속가능경제과)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로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디지털 교육 담당국인 디지털교육기획관이 신설된다. 인재양성과 디지털 교육전환에 방점이 찍혔다.

행안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바뀌며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한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국도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6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한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국도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6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1만명의 5%인 약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한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존속기한이 끝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된다.

국도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국힘 '수도권·MZ세대 대표론' 파장...尹心 실렸나 촉각

주호영 당대표 자적 언급

'한동훈 차출설' 등 연관 시골

국민의힘 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차기 당대표 자격으로 언급한 '수도권·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대표론'의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당권 주자들에게 대해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으면서 잠시 주춤했던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에도 다시 불이 붙는 양상이다.

6일 당내에서는 '수도권·MZ세대 대표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됐다.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나경원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의) '뉴 브랜드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거명되는 주자 중 수도권 중도 민심, 청년 민심을 잡을 주자가 안 보인다"는 말에는 "꼭 그렇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당 대표에게는 공천에 있어 대통령실

뜻과 실질적인 민심과 일치해 가는 공방이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다"며 "본인 미래보다 대통령 뜻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조율해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의 3선 윤재욱 의원은 TK 언론인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등 지역을 국한하기보다는 종선 승리를 이끌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맞는 이야기이고 우리 종선 승리의 조건"이라고 힘을 실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수도권·MZ 대표론'을 의식한 듯, 이날 첫 번째 전당대회 공약으로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의 확장'을 내걸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고 지역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 발언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실렸는지를 두고도 이리저리 이야기가 나왔다.

당내 친윤 모임을 주도하는 김정재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언론에 '윤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전혀 그렇지 않고 평상시 생각을 얘기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젊은 층, 당 취약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말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당사자인 주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과민반응이고 과장되게 이해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언급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발언을 '한동훈 차출설'과 연관짓는 해석은 여전하다.

윤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독대한 주 원내대표가 내놓은 메시지인 만큼, '윤심'이 실리지 않았느냐는 점에서도.

때 마침 윤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윤심'이 한 장관에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최근 윤 대통령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4인방',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인사들과 관저에서 연쇄회동을 하면서, 차기 당 대표직임자 찾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20주년!!

2022년 임인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료가 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체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농막
 옥성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